

설익은 통합 제안... 후속조치 없이 찬반 의견만 분분

광주·전남 행정통합 어떻게 돼가나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10일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제안한 뒤 일주일여가 지났다. 지역정치권, 시민, 교수 및 전문가 등이 찬반 의견을 제시하며 지역 내 이슈로 부상했지만, 적정 제안에 따른 후속 조치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 통합 상대방인 전남도가 원칙적인 공감만 표하고,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우선 '만남'을 제안했지만, 전남도는 지역 내 찬반이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는 상태에서 "난감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은 논의 자체로 상생 협력 분위기를 만들어 그동안 갈등·마찰을 보여왔던 현안의 해결과 함께 지역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행정·재정력 낭비 및 중복 투자 제거, 중앙정부 및 정치권을 상대로 한 단일 대외 형성, 기반시설 연계 등을 통한 시민 공공서비스 질 향상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사·도의 공동메시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분한 사전 교감을 통해 이 시장과 김 지사가 향후 상생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 통합을 위해 발판을 마련하는 방식이 우선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시민에게 공동메시지 있어야" 이 시장의 통합 제안에 대해 일부 정치권에서는 군공항 이전, 2차 공공기관 유치 등 현안에 대한 상생 협력이 먼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거 민선 1·2기 통합 논의 과정에서 생체기만 남겼다는 점에서 신뢰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당시 광주시는 대도시라는 지위 상실, 인사 및 재정권 귀속,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통합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가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 현상이 지역 현안으로 부상하자 태도를 바꿔 다시 협의에 나섰다. 그러나 행정·재정권 및 시간 낭비, 지역 내 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사·도 간 불신 등만 남기고 성과 없이 끝났다.

정치적인 이해 관계에 기반해 상호 이해득실을 감안한 통합 논의는 실패로 귀결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그동안 현안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마찰에 대한 반성과 함께 통합에 대한 이 시장과 김 지사의 분명한 메시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단기 전략 등이 이어져야 소모적인 논쟁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지금 같거나 마찰이 빚어진 것은 소지역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통합 논의의 시작과 함께 의미 없게 된다"며 "통합의 시작은 상생 협력이며, 이를 통해 광주·전남이 단단하게 기틀을 닦고 이후 협의를 이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내부의 논란은 있었으나) 통합은 시대적인 요청이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입장문에서도 밝힌 바 있듯 전남은 원칙적으로 통합에 동의하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난관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하는 입장"이라며 "인구소멸지역이 대부분인 전남의 입장에서는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지만, 광주가

광주시 만남 제안에 전남도 "난감"

이 시장·김 지사 공동메시지 필요
군공항 이전 등 상생협력 우선
대구·경북 20여년 준비 논의 순풍

지역 내 공감대를 광범위하게 형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또 "통합 이전에 현안이 있어서 광주와 전남이 시민에게 상생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구·경북 오랜기간 준비, 신공항 부지 합심해 선정 후 통합 논의 순풍=대구·경북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행정통합에 있어서 가장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 중이다. 이미 통합 방안까지 만들어 2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논의체인 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2022년 7월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시작하는데 정부 및 정치권에는 특별법 제정을 요청한 상태다.

대구 역시 지난 1981년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경북과 분리됐는데, 광주·전남과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통합 논의를 계속 이어왔다. 첫 통합 논의는 1999년 경북도청 이전 추진과 함께 나왔다. 이 점에서 광주·전남과 비슷했다. 그러나 경북도청이 곧바로 이전에 나선 것이 아니라 지난 2016년까지 대구에 존치해 있었다. 대구경북연구원 역시 지난 1991년 발족부터 통합 운영하면서 대구·경북 지역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꾸준히 해왔다는 점에서 광주·전남과 달랐다. 지난 2006년부터는 경제통합을 추진했다. 같은 해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가 발족하고, 2009년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2014년 대구경북한반도개발위원회, 2016년 대구경북 미래발전 범시민협의회가 각각 출범하는 등 민간 부문에서 통합의 불씨를 계속 지켰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구의 민간·공공합 이전 부지를 지난 8월 28일 경북 군위 소보·의성 비안으로 선정하면서 지역 간 현안을 해결했다는 점이다. 대구와 경북은 최근 공동합의문을 내고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의성군 발전방안으로 군부대 정문 및 영내 주거시설과 복지·체육시설 의성군 우선 배치, 항공물류·항공정비산업단지, 관련 산업·물류 종사자 주거단지 조성, 농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공항철도(대구·신공항-의성역) 신설, 도청-의성 도로(4차선) 신설, 관광문화단지(의성랜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 의성군과 협의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 대구(243만명)·경북(264만명)은 인구 500만명이 넘어 대한민국 3대 도시로 부상하고 GRDP는 165조7000억원으로 전국의 8.7%를 차지하게 된다고 예상했다. 지방세는 6조9000억원 규모로 경기, 서울에 이어 3위 수준으로 도약하고 수출액 규모도 경기, 충남, 울산, 서울에 이어 5위로 발돋움하게 된다.

윤현석 기자 chad01@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내 그린뉴딜 추진기업인 두산중공업을 방문해 가스터빈고온부품공장을 현장 시찰하며 세라믹코팅 블레이드를 살펴보고 있다. 왼쪽부터 성운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 대통령, 박지원 두산중공업 회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정연인 두산중공업 사장. /연합뉴스

문 대통령·민주당 지지도 동반 반등... 국민의힘 하락

리얼미터 여론조사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동반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4~16일 전국 유권자 1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8%포인트 오른 46.4%로 나타났다. 3주 만의 상승이다.

다만 부정평가도 전주보다 0.3%포인트 상승해

50.3%를 기록했다. 모름·무응답은 전주보다 1.0%포인트 내린 3.3%였다. 2주 연속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 긍정-부정 평가 격차는 3.9%포인트로 오차 범위(95% 신뢰수준 ±2.5%포인트) 안이다. 연령대별로 20대(40.9%·4.3%포인트↑)에서 상승 폭이 컸다.

아들 군 휴가 논란에 대한 추미에 법무부 장관의 사과와 적극적인 해명,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추진 등이 지지도 변화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5.7%, 국민의힘 29.3%였다. 민주당은 직전 2주간의 하락세를 벗어나 전주보다 2.3%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은 3.4%포인트 떨어졌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20%대를 기록한 것은 7월2주차(29.7%) 이후 2개월 만이다. 직전 조사에서 0.7%포인트로 좁혀졌던 두 당의 지지도 차이는 6.4%포인트로 벌어졌다. 오차 범위 밖이다. 이어 열린민주당 5.7%, 정의당 5.7%, 국민의당 5.7% 등으로 3개 정당이 동률을 이뤘다. 무당층은 14.1%였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광주 국회의원 정례모임 공식화... 시도 정치·행정 '4자 연석회의' 가시화

매달 한자리 모여 지역현안 해결 논의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례 모임을 공식화한데 이어 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을 위한 시도 정치·행정 협의체인 '4자 연석회의'도 가시화되고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역 지역 국회의원 8명은 한 자리에 모여 매달 정기적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모임을 갖기로 했다. 양향자(서구) 의원의 민주당 최고위원 당선 축하를 결집한 이날 회동에서 광주지역 의원 모임 회장으로 이병훈(동남) 의원을 뽑고 정례 만남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이들 의원은 최근 시도 통

합을 주장한 이용섭 시장과 다음 달 3일 광주에서 만나 지역현안을 논의한다.

이용빈(광산갑) 의원은 "지역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 등을 위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힘을 보태기로 결의했다"면서 "시도통합에 대한 서로 생각을 주고 받았고, 이 시장을 만나 구체적인 생각을 들어 보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당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승남(고흥보성 장흥강진) 의원은 자신의 공약중 하나인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광주시당위원장, 전남도당위원장 등 4명이 지역현안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4자 연석회의'를 제안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도당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일선으로 '4자 연석회의' 정례화를 들고 나왔는데, 이번에 이 시장의 광주·전남통합 제안 등과 맞물려 첫 회의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최근 송갑석 광주시장위원장에게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4자 연석회의의 제안을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7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민주당 송갑석 광주시장위원장, 서삼석 전남도당위원장이 참석해 광주 군공항 이전과 전남의대 유치, 혁신도시 시즌 2, 등의 지역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